



고용 안정, 졸속·일방 전보 철회, 구조조정 중단, 정기 상여금 1백만 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 관련 기사 12면

2015년 민주노총  
투쟁을 둘러싼  
논쟁

6 ~ 7면

민주노총  
전략선거구 후보들

2면

여전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세계경제

3면

배제와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10면

공공부문 노동자  
이간질에 맞서

4면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은  
자본가들만 혜택 본다

8면

누구의 딸일까요?

“난민 1백만 명 받을 테니 트럼프 좀 데려가다오”  
트럼프 반대 미국 시위대 현수막

“영국인들이 세계 나라의 절반을 침공하고 지배할 때 과연 그들은 몇 개 국어나 했던가?”  
영국 정부가 ‘영어 못하는 무슬림 여성’을 거론하며 테러 위험 운운한 것에 대한 한 무슬림 여성의 일갈

“성폭행범 속옷은 뒤지는데 디지털 정보는 왜 안 되나.”  
오바마, FBI의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 요청을 두둔하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  
촛불 켜면 물대포 쏘던 박근혜  
“김무성이 죽어버리게, 죽여버려, 이 XX. [비박계] 다 죽여.”  
새누리당 윤상현의 ‘취중진담’?

“19대 때 대표적인 청년 공약이 뭐였겠습니까? 반값 등록금 아니겠습니까? 그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 지켜진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요구는 들어본 적 없는 듯한 새누리당 ‘청년후보’ 이준석

“눈요기는 됐다. ... 속기록에는 남기지 말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하남신, ‘한국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몸매’ 같은 자막을 내는 등 문제가 된 KBS ‘머슬퀸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다른 나라 여성 정치인] 대부분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고 튼튼한 거구를 자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성으로서의 미와 모성에 적인 따뜻한 미소까지 갖고 계십니다.”  
“이럴 때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좀 사상이 불순하지 않나 싶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소강석 목사의 낮뜨거운 찬양, 박근혜는 여성차별적 칭찬에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

“세월호 사고 때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따르지 않고 탈출했을 것”  
‘개념 없는’ 연세대 이과대 부학장 이승철 교수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민중주의 논쟁  
    **꺾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를 만든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 ★ 북한 핵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과물'**
- ★ 북한, 중국, 옛 소련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 ★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 ★ 음모론과 마르크스주의
- ★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정의당), 경북 경주의 권영국 후보(무소속, 시민혁명당)가 그들이다.  
네 후보 모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경제 위기 고통전기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회찬 후보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재치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노후보는 당면한 “노동개혁”에 맞서 정리해고제한법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을 폭로했다가 정치 보복성 판결로 의원직을 빼긴 바 있다. 이번에 창원에서 새누리당을 꺾고 정치적 ‘복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각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울산 북구 윤종오 후보, 울산 동구 김종훈 후보, 창원성산 노회찬 후보, 경북 경주 권영국 후보.

구청장, 동구청장을 지냈던 윤종오 후보와 김종훈 후보는 재임시 새누리당 소속의 울산시장과 충돌을 불사하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이런 복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이유다. 두 후보는 쉬운해고금지법, 비정규직



의 정규직전환법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박근혜의 “노동개혁” 저지 투쟁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권영국 후보는 용산참사의 실질 책임자인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를 정조준해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초대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지낸 그는 용산참사, 각종 주요 노동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쌍용차 대한문 농성 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운동 건설에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이런 ‘보수적 중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더민주당을 “낡은 진보”라고 지칭한 것이다.  
안철수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동원한 박근혜의 테러방지법 통과 시도에 ‘여야 모두 문제다’ 하며 양비론을 펴 사실상 새누리당을 도왔다.  
더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일부는 안철수의 탈당으로 더민주당이 ‘야성’을 강화할 거라 기대했음직도 하다. 실제로 안철수 탈당 직후 오히려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유지되지 못했다. 사실 표를 늘리려고 양 날개 전략을 펴 온 문재인도 무게중심은 오른쪽 날개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훌륭한 인재라고 극찬했던 한미 FTA 협상 책임자 김현종(최근 미국의 기업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도

입을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폭로됨)을 비롯해 제주 강정마을 진압 책임자였던 전 인천경찰청장 윤종기, 삼성전자 경영진 출신 양향자 등을 총선 전략 공천 후보로 영입했다.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상징적인 조처는 문재인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전략적 야권연대 협의체에 합 의하고는 바로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맡긴 일이다. 김종인은 전두환 · 노태우 정부에서 중용됐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공신의 일원인 보수적 인물이다.  
김종인은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필리버스터를 “이념 전쟁”이라며 중단 시켰고 다른 날도 아닌 삼일절에 “위안부 협상의 일단 국가 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한 윤종기 등을 전략 공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종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유가족 지지 차원에서 영입한 박주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뺄뻔이 돌리며 공천을 미루고 있다. 이런 푸대접에 4 · 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SNS에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 왜 이렇게 항상 우리의 가슴에 비수만 꽂는가” 하는 분노의 말을 남겼다. 정청래 낙천도 보수층을 의식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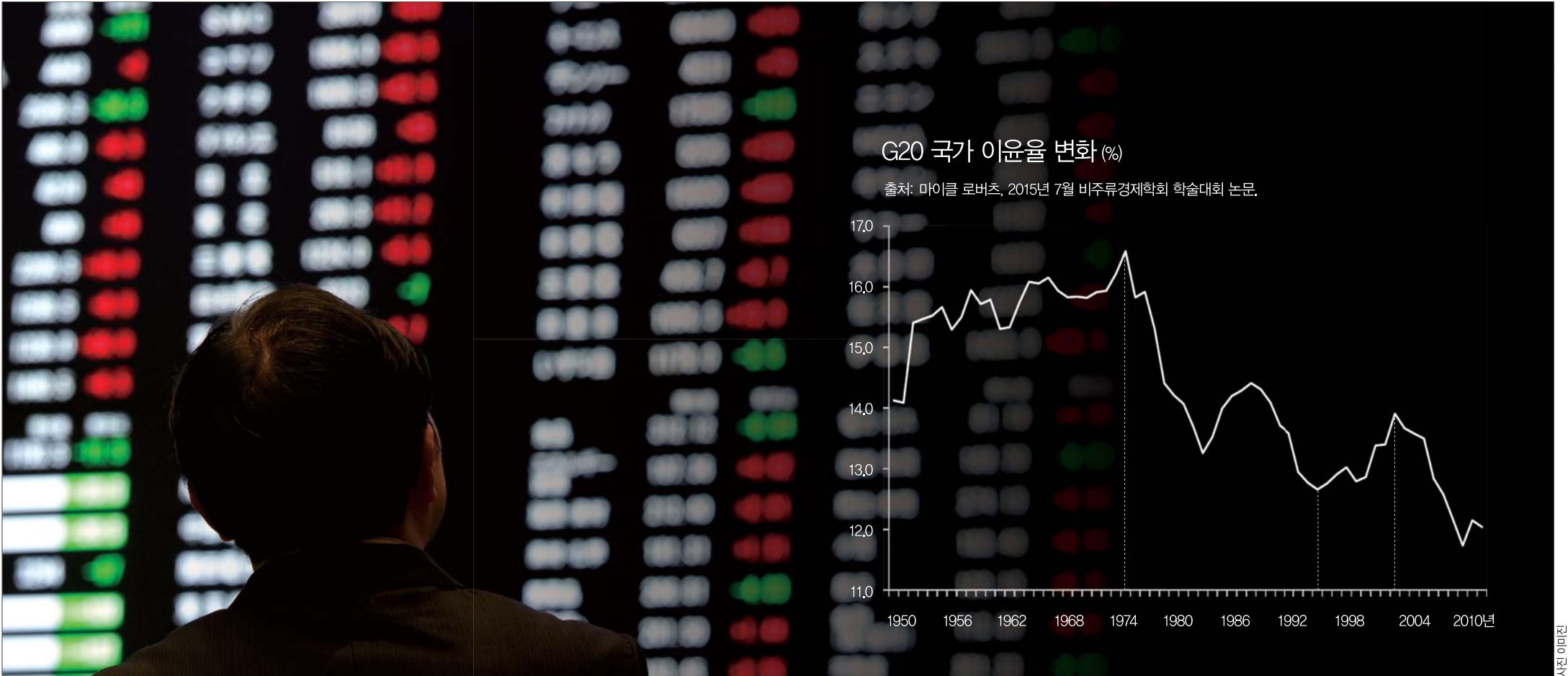
치적 참수”로 볼 수 있다.  
결국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수적 중도층’을 새누리당에게서 빼앗아 오는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행보는 2012년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론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진보 정당과의 야권연대 때문에 “중원”, 즉 보수적 중도층을 새누리당에 빼앗겨 패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한편, 정의당은 더민주당의 우클릭으로 야권연대가 난관에 봉착하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더민주당, 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목표로 한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해 왔다. 이제 정의당은 반새누리 야권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책임이 더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자 완주를 공언하고, 수도권에서 지역구 독자 출마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독자 완주하면서 더민주당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들의 진보적 유권자층의 표를 결집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당의 선거 목표 성취에도 이로울 것이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을 앞질러 12.8퍼센트로 치솟았다. 그동안 야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집권

우파의 독주를 막는 데 너무 무능하고 물렁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우클릭은 공식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재촉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우익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주류 정치 우경화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 · 안보 위기 때문에, 한국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주류 정치의 우경화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지지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급진적인 방향, 즉 노동자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성장, 사회운동으로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 좌파 개혁주의 정당의 성장 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최근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부상했다.  
물론 정의당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 아니라 주류 개혁주의 정당이다. 그래도 국제 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해 보면, 정의당의 좌파들이 고통 전가와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선거적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문성



#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것은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옳음을 입증한다

조셉 추나라

세계경제가 정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새로운 재앙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없이 굴러가던 적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가 때로 힘들 때가 있다. 6년 전 나는 《소셜리스트 리뷰》에 '경제 위기는 과연 끝나가는가, 이제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다행히도, 나는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무척이나 들뜨고 과장되게 회복 전망이 나오던 당시 경제 상황을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이라는 세 단어로 묘사했다.

2008년 경제위기를 겪고도 이윤율이 떨어지는 자본이 충분히 파괴되거나 감가되지 못하고 부채도 충분히 감축되지 못해, 이윤율이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시의 경제 회복은 부진했다. 너무나 부풀어오른 금융 부문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의 징조가 일반적이 됐으므로, 당시의 회복은 취약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창출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위기를 진정시키려고만 했던 국가 개입은 회복의 불확실성을 낳았다.

마이클 로버츠, 앤드류 클라이먼, 굴리엘모 카르케디, 고(故) 크리스 하먼 같은 여러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물론 필자를 포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전망이 언제나 정확히 들어맞은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을 익혔다고 해서 경제 전망을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혁명적 좌파 조직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래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주류 경제학자들(과 우리의 주장을 거부한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더 옳았음은 증명돼 왔다.

회복 부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 마이클 로버츠가 지적했듯이 미국 경제는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신세인 듯하다. 이 환자의 증세를 열거하면 이렇다. “제조업 산출 감소, 기업 활력 감

소와 자본재 주문의 부진, 기업 이윤의 하락.” 유럽연합도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이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수축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부진은 남반구 경제대국들, 특히 중국 경제의 힘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들 했다. 바클리스은행 은행장 존 맥팔레인도 최근 이렇게 말했다. “지난 수년간을 되돌아보면 세계는 이 층으로, 즉 신흥시장과 부유한 산유국은 잘나가는 반면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식으로 돼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실상 중국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뿐더러, 요즘 들어서는 되려 불안정의 진원지가 됐다. 경제 위기 이전 시기 중국 경제는 고강도 착취, 유례없이 많은 투자, 수출 지향적 생산에 의해 성장했다. [그런데 위기로] 수출시장이 마르기 시작하자, 중국 국가는 이에 대응해, 돈을 풀어 폭발적 수준의 투자를 유지시키고자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가 그 결과를 포착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중국은 ‘부채 주도 투자’를 크게 끌어올려 대외 수요의 부

진을 상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기저에서 성장은 둔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본한계지수’(추가적 소득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자본의 양)가 2000년대 초 이래 두 배가량이 돼 버렸다. ... 새로 추가되는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와 연동된 부채의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였다면 이러한 상황을 ‘과잉 축적 위기’, 즉 총량이 제한된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과잉 축적

중국 경제의 둔화는 브라질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호황에 발맞춰 자국 경제의 지향을 대(對)중국 원자재 공급처로 바꾼 다른 여러 나라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해 왔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결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석유·셰일가스 업체들을 약화시키려고 석유를 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 이 조처는 처음에

는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지만, 요새는 러시아·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 같은 에너지 수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에 충격이 새로 가해질 때마다 그 충격은, 내가 둘째로 언급한 금융의 취약성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증폭된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 증시가 급변동을 겪은 것을 보라. 특히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친 것을 보라. 이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반면, 대출해 준 돈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은행들의 손해가 예상되면서 주가도 폭락한 것이다.] 마틴 울프가 지적한 대로, “은행들은 ... 여전히 사슬의 약한 고리이며, 자신들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은행과 연결된 다른 부문들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셋째 측면인 회복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를 지탱하려고 개입할 때 구제금융 투입 같은 직접적 개입만 했던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 책정 등 중앙은행을 통한 금융적 조

치도 활용됐다.

이 조처들이 목표한 바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보장해 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윤율이 폭 꺼진 조건에서 그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풀린 돈은 오히려 은행에 쌓여 축장되거나 금융 투자로, 그중에서도 고수익·고위험 투자나 남반구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제 미국이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돈의 흐름은 역전됐다. 지난 수년 간 자본을 빨아들이던 중국에서조차도 요즘은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2015년 신흥시장에서 유출된 자금 7천3백50억 달러 중 5백90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92퍼센트] 돈이 전부 중국에서 유출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2016년에 후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이전의 위기로부터 채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체제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를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6년 3월호 / 번역 김중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

## 맑시즘2016

7월 21일(목)~24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70개 알파 주제

차별과 천대, 착취에 반대하는 사상 토론

평등하고 공정한 청중 토론

따분하거나 현학적이지 않은 토론

헛되지 않은 가능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토론



해외 연사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다.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근간)의 저자이다. 영국의 대표적 반전 운동 연합체인 ‘전쟁을 중단하라’ 연합(Stop the War Coalition)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를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서 연설할 것입니다. 연사와 주제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됩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 맑시즘은 16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압포를 놓고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도입해 비효율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성과주의 도입은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낳고 비효율을 높일 것이다. 최근 한 연구는 1977~2008년 미국 공공부문의 경험을 봤을 때, 성과급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패의 주요 원인은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이었다.

사실, 공공부문의 업무는 대부분 협업에 기초하는 데다 업무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서로 다른 업무들을 일률적 지표로 측정하고, 등급별로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상대평가를 하고, 상급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평가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연공급 임금체계를 깨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고령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를 해체하고자 한다.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 임금 삭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당장은 성과 평가에서 하위 성적을 받은 노동자 약 25~30퍼센트



공공부문 노조들의 공동 투쟁과 공동 파업을 실질화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기층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금부터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의 임금이 삭감된다. 여기에 더해 성과평가를 누적해 적용하게 되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당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일단 누적식 평가 계획을 거둬들였지만, 간부들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기재부의 계획만 봐도, 공기업에서 기본연봉이 6천만 원인 3급 간부의 경우 최고와 최저 연봉 격차가 1천8백만 원까지 벌어지고, 기본연봉이 4천5백만 원인 4급(대리급)의 경우도 7백50만 원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 노동자들 사이에 더 나은 성과 평가를 받기 위한 경쟁이 격화돼 협업이 악화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단기 실적에 매달리도록 내몰기 쉬워질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

워질 것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보다 과잉진료를 8.5배나 했다고 한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재부의 경영평가 잣대를 보면, 공공성보다 수익성과 부채 관리가 성과 평가에서 강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공동 파업

이처럼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평가 시스템 등이 마련되면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도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 취업규칙에(현재는 사문화된) 저성과자 직권면직 조항이 있어,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올해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가스, 건강보험공단, 서울·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국민연금공단 같은 주요 공공

기관 노조들의 공동 투쟁과 이 노조들의 교섭권·체결권 위임 전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노조의 양보교섭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정부 교섭도 모색하려는 듯하다.

최근 철도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는 각각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체결권 위임을 결정했다.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은 이 위임 전술이 노조 집행부의 양보 교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정서가 적지 않다. 이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일인데, 지난해 두 사업장 모두 집행부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해 이에 대한 만만찮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만으로 공공기관 주요 노조들의 공동 전선이 유지될 수 있는지 하는 우려도 있는 듯하다. 당장 정부의 공격 시점도 공기업은 6월, 나머지 공공기관은 연말까지로 일정한 시차가 있어 시기를 집중해 함께 싸울 수 있을지, 집중해 투쟁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등에 대한 물음들이 있다.

6월 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겨냥해 공동 파업 등 집중 투쟁을 6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투쟁을 돌아보면, 정부의 개별 작업장 압박이나 회유 등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면 강력한 투쟁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조들의 공동 투쟁 전선을 지키고 공동 파업을 실질화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기층 노동자들의 활동과 투쟁을 지금부터 건설해 가야 한다. 3월 26일 공공부문 4개 노조의 연대 집회는 이를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노동법 개악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단호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전투는 전체 노동 개악 저지 전선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방어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정원

##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최대한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투쟁을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성과급 지급 시기를 동일하게 맞춰 효과적으로 중앙 반납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등이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울산본부는 지자체의 성과급 선(先)지급 계획에 맞서 신속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3월 16일 서울시에서 성과급 지급 중지 요구를 하며 서울시장 항의 면담과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시의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 투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의 행동이 확대돼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이 투쟁에 집중하고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공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부나 본부가 임의로 지자체와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식으로 각자 대응하면 안 된다. 공무원노조 산하 전 조직이 대의원대회 결정인 중앙 반

납 투쟁을 조직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일일이 조직해야 하고, 지부별로 제각기 상황과 조건이 다른 것도 있다. 또 정부가 중앙 반납 조직자를 탄압한다는 얘기도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국정교과서 홍보, 성과급 확대·강화 지침 등을 거스르는 것이 ‘소극행정’이다. 따라서 “소극행정을 징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만 시키려는 의도”(공무원노조)이다. 무엇보다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 나서

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 지부장은 “지부에서 성과급 반납을 조직할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 잠도 안 올 지경”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세운 노조 ‘지침과 결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각자 대응하면 중앙 반납 전선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2월에 받은 성과급을 중앙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법원본부는 ‘8월에 받을 성과급은 중앙 반납 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중앙 반납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들 노조 지도부가 묵인(사실상 승인)한 것도 문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중앙 반납을 결정한 이상, 이를 집

행하지 않으려는 지부나 본부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중앙 반납의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앙 반납 조직에 나설 수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두 달 동안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하고 정부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자, 최근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성과급 저지 투쟁을 위해 중앙 반납을 결의하고 공무원노조 가입 총투표를 시도했던 것만 봐도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도 능동적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중앙 반납 투쟁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 전교조

##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 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4일 '본부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당해고의 칼날을 당장 거두라!'고 강력 항의했다. 전임자 복귀 거부는 정부 탄압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은 제쳐놓더라도,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현재와 법원은 법외노조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를 이유로 행해지는 '전임자 복귀명령, 사실상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의 후속조처는 모두 위법이고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미복귀자 직권면직은 결국 법외노조화에 저항하면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 막무가내

이런 막무가내식 탄압의 정치적 목적은 전교조의 손발을 묶어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는 '일반 결사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외노조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그러나 노동법 관련 가장 권위 있는 단체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이나 '한국노동법학회'도 전교조가 "헌법상 단결체인 법외노조"의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박근혜의

전교조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자 고통전이 프로젝트도 다급해졌다. 공공부문부터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같은 주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저항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 최근 행자부가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를 고발한 것도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급제 확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집요한 탄압에도 전교조는 저항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난 2월 27일 대의원대회는 "전교조 지키기와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를 위해 합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3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위원장은 "이번 삭발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온몸 바쳐 참교육 전교조를 사수하겠다는 각오"라며 "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릎은 꿇을 수 없다"고 단호한 결의를 밝혔다.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지도부의 항전 의지 표명은 기층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이로운 것이다.

박근혜는 전교조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과급·교원평가 악화, 교육 긴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부당해고의 칼날을 당장 거두라!!” 3월 14일 전교조 기자회견.

## 진보교육감들, 정부의 부당 명령 수용 안 된다

대다수 진보교육감들은 처음에는 교육부의 후속조처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내놔다. 그러나 정부가 직무이행명령이나 직무유기 고발 등으로 압박하자 동요하거나 후퇴하고 있다. 노조 전임 휴직 신청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3월 14일 내부적으로 직권면직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진보교육감들도 복귀 거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만 직권면직이 법률상 가능한지를 자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임자는 '법률'이 아니라 '단체협약', 즉 노사간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임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협약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도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전임 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수

용하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는 것이다. “정권의 눈치나 보며 헌법 정신을 포기하고 노동조합의 권리 파괴에 동조한다면 어찌 '진보' 교육감이라 할 수 있으랴?”(3월 14일 전교조 기자회견문) 사실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김병우 충북교육감)이다.

## 고유 권한

어떤 이들은 '교육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전교조에 도움이 된다'거나 '교육감이 정부의 직무유기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전교조 활동 공간이 일정하게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부가 진보교육감들의 진보적 교육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압박할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되던 바였다. 그래서 진보교육감들(13명)은 후보 시절인 2014년 5월 19일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정부에 복종하

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이것이 진보교육감을 지지하는 노동자·서민의 가장 큰 바람일 것이다. 그런 바람을 외면하고 진보교육감이 거듭 후퇴한다면 과연 진보교육감이 왜 필요한지를 묻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경기, 인천, 충북 등 일부 교육감들은 단체협약 해지도 통보했다. 단협은 교사들의 노동조건, 학교 교육 여건, 민주적 학교운영, 학생인권 등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단협 해지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조처이기도 하다. 전교조에 대한 공격은 참교육에 대한 공격과 연결돼 있다.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압박에 동요하거나 후퇴한다면 보수가 득세할 것이고, 그리 되면 교육감들의 교육 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후속조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 51명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티브로드 사측이 하청업체와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전주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 고용하겠다고 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해고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기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결국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됐다.

티브로드는 지난 몇 년간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하청업체로 가는 비용을 줄이고, 각종 성과 지표들을 강요했다. 이것이 티브로드가 케이블 업체 중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비결이다. 노동자들이 원청인 티브로드에게 고

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원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완강히 투쟁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사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만 원청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교체되는 '바지사장'이에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쫓 일합니다. 저도 21년 동안 일했어요. 우리 고용은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김진태 한빛북부기술지회 지회장)

전주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3월 3일 원청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센터 연좌시위로 이어졌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효과가 컸다. 노동자들의 작업장 연좌 농성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측을 압박했다. “새 사장은 시간만 끌고, 원청도 나물

라라 하는 상황에서 원청에게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청 사업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센터로 들어갔죠. 우리가 센터에 들어가니까 경찰과 직원들이 당황해서 바깥 출입문을 막았어요.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한 것 같아요.”

## 조합원들의 사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원청 사업부장이 나와서 '사장과 면담을 주선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조합원들도 사기가 쑥 올라갔어요.”

“사장과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자신은 처음부터 고용을 승계하려고 했으며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압

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가 고비예요. 서울 상경 투쟁도 하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

2013년에도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파업 중 원청 본사를 점거해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 사측에게 점거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던지 파업 한 달이 되도록 '하청업체 직원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외면하던 티브로드 원청에서 임원이 직접 나와 노동자들과 교섭을 약속했다.

사측은 처음에는 경찰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끌어내렸다고 위협했지만 점거파업 소식이 언론을 타며 순식간에 조짐이 되자 본사 농성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가뜰이나

태광그룹 회장 모자의 비리 때문에 추문에 시달리던 원청은 점거파업으로 위장도급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세에 몰렸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점거파업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주며,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영감을 불어 넣었다. 전주센터의 노동자들도 바로 이런 투쟁을 보며 용기를 얻고 노조에 가입했던 동지들이었다.

경제 위기 때문에 폐업·무급 휴직·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 위협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을 지키는 효과적 전술로서 점거에 대해 노동자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센터의 사례는 작지만 가능성을 보여 줬다.

조명지



##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 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 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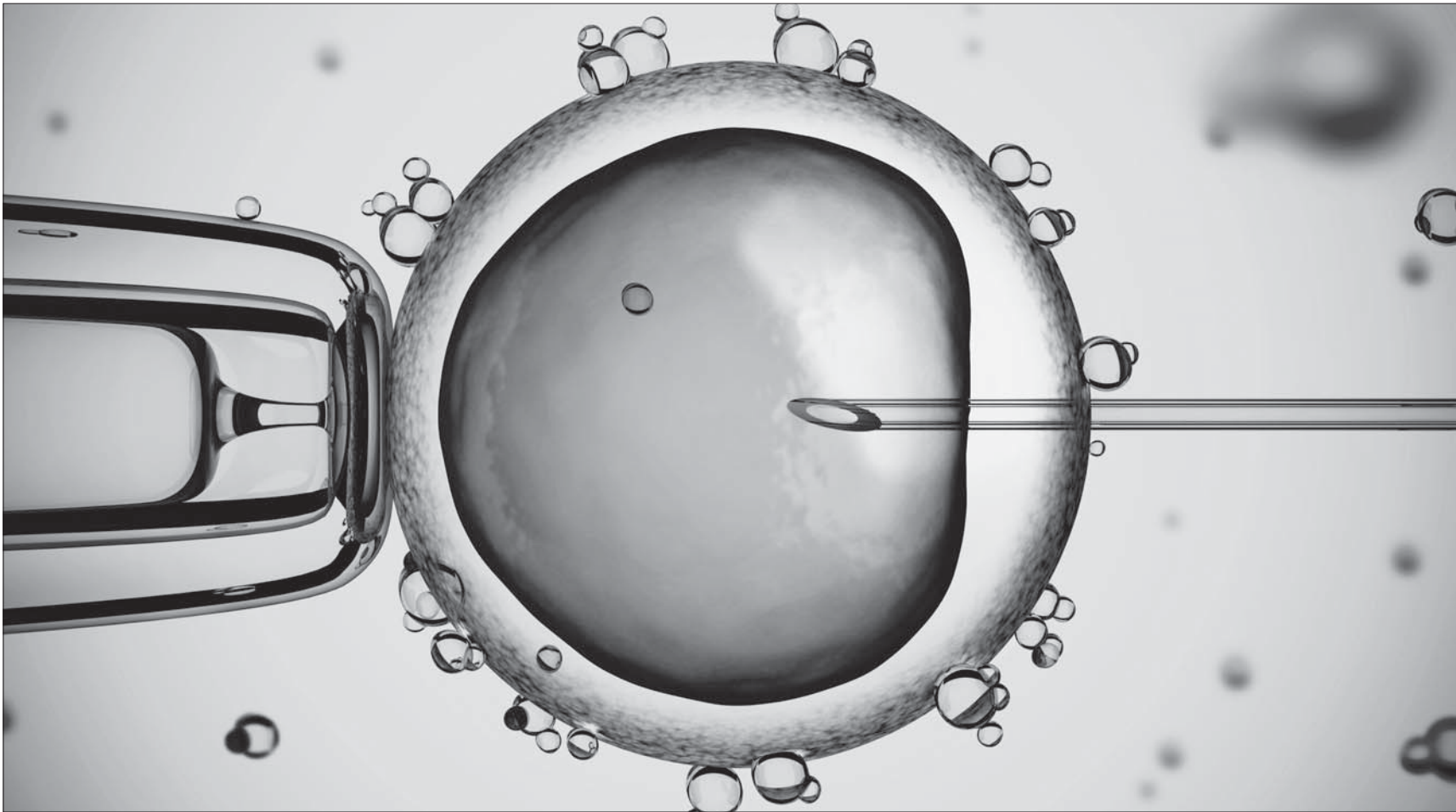
다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용화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일본에서 줄기세포(iPS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켜 노인성 망막황반변성증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험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두 번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돼 중단됐다. 특히 이 중에는 발암 유전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아직 줄기세포의 정확한 조절 메커니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 또다시 쌓이는 거품

황우석 사태를 통해 겪었듯이 ‘산업’적 전망을 앞세운 개발 시도는 오히려 제대로 된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에는 중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기대보다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한 권력과 자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황우석에게는 별다른 검증 없이 재정이 수백억 원 지원됐지만 황우석과 함께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한 그 많은 지식인들도 별다른 반성 없이 만장하기 바빴다.

제대로 된 비판과 반성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국 줄기가 다시 자란다. 벤처 회사인 RNL바이오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흐름에 편승해 한국인을 일본과 중국에 데려가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를 금지한 국내법을 피하려 원정 시술을 한 것이다. 2009~2012년 말까지 일본·중국에서 2만여 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그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이어 RNL바이오는 2011년에 부실 회계 무마를 위해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에게 5억 원을 건넸고,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고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비서관에게 로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이후 김종률 전 의원은 자살했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 비서관 이 모 씨는 CJ그룹에 스카우트됐다.)

그러나 제2의 황우석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고 상황은 거꾸로 치달았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직접 나섰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실험의 한 장면. 제약 자본가들은 기술의 불안정성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성급한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압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보다 오랜 기간 방대한 시험을 진행한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시판을 허가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3종이 허가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종이 추가됐다. 전 세계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7종 가운데 4종이 한국에서 나왔다. 진정 의미 있는 성과라면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네이처 메디신》 같은 유수의 과학잡지들을 통해 한국의 허술한 줄기세포 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 동료심사 자료 적은데도 줄기세포 치료 허용’, 2012년 18권 3호).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국에서 한 건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아베 정부가 쓴 위험한 화살

최근에는 한·일 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경쟁이 불붙으며 한층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했다. 첫째, 후생노동성에 비교적 간단한 승인절차를 밟으면 병원 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일본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식 치료제 시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전역에 적용되는 정식 승인 절차로서,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라면 유효성(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끝나지 않아도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판매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는 이후(7년 내)에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첫째 경우는 유럽에서도 병원 내 신속적용(Hospital Exemption)이라는

제도로 10여 년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 이 제도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덴마크 1건, 네덜란드 5건, 독일 17건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27개 유럽국가에서는 허가한 사례가 없다. 그나마 허용된 제품들도 이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충분한 연골세포 이식술이 대부분이었다.

이 제도가 적용된 뒤 10년이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은 평가서를 발표했다. EU는 적절한 임상시험 없이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제도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까다로운 정규 시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병원과 계약을 맺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올바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둘째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전체 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이 유효성 검증 단계부터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의 약이 개발에 실패하는 것도 바로 이 유효성 검증 단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엄연히 유효성 평가를 하는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돈을 받기는커녕(‘시험’이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치료제를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유효성 검증도 방해한다. 가장 확실한 유효성 평가는 이중맹검시험(Double-Blind Test)이다. 이중맹검시험은 일부러 가짜 치료제를 만들어 진짜 치료제와 섞어 놓은 뒤, 의사와 환자 모두 어느 것이 진짜 치료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위약효과’(치료제라고 믿으면 치료 효과가 일부 생기는 현상)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짜 치료제(또는 다른 치료제)를 투여할 수는 없다. 게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부다.

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여 거짓된 유효성이 발생할 수 있다(Doug Sipp, RIKEN, Nature Medicine 2013). 즉, 제대로 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장된 유효성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병원 내 신속적용 승인절차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2014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개별 병원 책임하에 약 2천8백여 건의 시술을 허용했다. 약사법 개정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전국 판매가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벌써 2개다.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은 이미 일본으로 러쉬를 시작했다.(R. Lee Buckler, The Life Sciences Report, 2014, 10, 22.)

###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맞장구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제시한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병원 내 신

속적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1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안홍준이 병원 내 신속적용을 골자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시간 새누리당 의원 장정은이 안전성만 확보되면 일단 시판을 승인해 주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1일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일본의 그것보다 심각하다. 안전성만 확보하면 시판승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판 이후 유효성에 관한 자료 수집, 평가 및 검토 의무조차 없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 심의조차도 생략할 수 있다(10조 2항). 식약처의 관리감독 의무를 피하려고 별도의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두려 한다. 단계별로 각각 기관 6개의 기관에 책임을 분산시켜 책임소재마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개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의무로 규정해 놓은 반면, 필수적인 장기추적 조사에 대해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다”며 허술하게 풀어 놓았다.

이제 막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가속이 붙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재생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환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자본들만 재생할 뿐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RNL바이오마저 보란 듯이 네이처셀로 이름을 바꿔 재생을 노리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또다시 쌓이고 있는 이 거품 속에서 과연 포식자가 누구이고 먹잇감이 누구인지 이미 명확하다.

#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속에서 저임금 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층 비율이 가장 높는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 4백70만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부 공익 위원들은 고작 4백50원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보다 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에 따르면, 노동자 한 명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임금은 월 2백50만 원가량이다. 3인 가족이라면 5백만 원은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평균 가족 수가 세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최저 시급 6천30원(월급 1백26만 원)으로는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협상에만 의존해



2015년 4·24 총파업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정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올바르게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투쟁을 더 전진시키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에 개최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내걸고 확대 간부 파업을 하는 등 투쟁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산별노조들의 교섭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단위 사업장별 임금 요구안으로도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을 압박하고,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의 중요성을 공유해 최저

임금 투쟁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도 기본급이 시급 1만 원에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왜곡된 임금 구조 속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기본급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봐도 정규직 임금과의 비교는 온당치 않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조합원들은 마땅히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럴 때,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임금 정규직 탓인 양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점을 알리며 조직을 확대할 밑거름을 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고 맹공을 펴고 있는 지금,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등의 요구를 내걸고 대중적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연대하자.

조명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 등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크다. 이러 부담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하면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가 파탄나거나, 간병을 담당하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오래 전부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간병 서비스 제도에 열의가 없었다. 2007년에서야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민간에 맡기거나 단기간에 그치지 일쑤였다. 2013년 7월에는 ‘포괄간호서비스’란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로 가족 간병의 문제가 드러나자 부랴부랴 지난해 12월에 의료법을 개정하고,

2018년으로 예고한 서비스 확대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와 환자 가족 94퍼센트가 만족스러워 했다. 낙상과 욕창 발생률, 감염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간병 비용도 줄어들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환영한다.

그런데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제로 그 일을 맡게 될 노동자들의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간호 인력이 대폭 충원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이 기존 간호 업무에 더해 간병까지 담당하므로, 업무가 대폭 늘어난다. 이윤에 눈 먼 병원 자본들이 인력에 투자하기를 꺼려 지금 한국의 병상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노동 강도와 밤근무 비율이 높아 많은 간호사 노동자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현재 간호사 면허자의 60퍼센트가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형편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 1인당 4~5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

런데 한국 정부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이보다 훨씬 낮다. 한국 정부의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5~6명, 종합병원은 8~12명, 병원은 10~14명이다. 간호사 1인당 8명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한 서울의료원에서는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이 늘어, 시범사업 참가 간호사들의 60퍼센트의 근속년수가 3년 미만이라고 한다.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이 아닌데도 이렇다. 이러면 환자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대폭 상향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인력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간호사 같은 전문직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파견법을 개악하려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값싼(시간제 등) 파견 노동자들로 채울 수 있게 함으로써 병원 자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일 수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도 지방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수도권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범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지역 저점 공공병원이 6곳이나 됐다. 따라서 정부가 내세우는 간호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셋째, 간호 인력 중에서도 5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간병인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중요하다. 그동안 병원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간병인들은 사실상 파견업체들에 고용돼 일해 왔다. 이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배제돼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 자본은 기존 간병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재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그동안 간병 경험을 더해 간호 보조 인력 등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참에 간병인 노동자들을 병원의 정규 인력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비정규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 중 하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몇 년째 흑자를 이어 17조 원이나 쌓여 있는데도 건강

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쓸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참에 흑자를 핑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 폐지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파견법 개악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고, 올 7월부터 입원비를 인상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 폐지하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

병원 자본들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수가는 더 받으면서도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간 병원들에 대한 강력한 정부 통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제대로 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인력 확충, 보장성 강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자 등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김재현

#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과 다문화주의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를 찾은 이주민 가족

김종민

## 이정원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 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결혼 이주민 중 귀화자 비율이 점차 늘어 43.4퍼센트(법무부, 2012년 6월)에 이른다. 또 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이 가파르게 늘었는데 18세 이하 자녀는 2015년 통계로 20만 8천 명에 이른다.

앞으로 정부가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충당하기 위해 제한적일지라도 이민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는 점, 이주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이 더 늘고 있는 점, 기존 정주 이민자들을 통해 연쇄적인 이민자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 이주민 증가에 따라 ‘인종’ 간 혼합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볼 때 다인종·다문화적 인구 구성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 정부의 다문화 정책

이런 변화에도 한국이 다문화주의의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차별과 편견이 없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와 정책들을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률을 제정했지만, 그 이후로도 정부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다문화주의를 역행하는 정책들도 병행됐다. 한국은 여전히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이민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민에 대해 “실정법 상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꼽힌다.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권을 제약당했고 미등록 이주노동

자들은 야만적인 단속·추방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들 중에 이주노동자를 가장 많이 추방한 기록을 세웠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의 중동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등 전쟁 지원에 나서면서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의 출신 국가, 경제적 지위,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더 강화했고 다수 이주민에 대한 규제와 통제도 강화했다. 이주 정책에서 인권과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던 내용은 점점 축소되고 이주 정책의 전면에 ‘국가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국경 관리’가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도 결혼 이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언어 교육, 통역 제공, 각종 상담)를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늘어나 결혼 이주민 자녀들이 곧 사회로 진출할 때를 대비한 ‘사회 통합’에 있다.

우파 정부들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체류 자격, 경제적 조건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열악해졌다. 게다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퍼뜨렸다. 특히 최근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이주민을 잠재적 테러 위협 집단으로 삼고 있어 무슬림을 비롯한 이주민 마녀사냥은 더 강화될 것이다.

결혼 이주민은 ‘위장 결혼’이라는 의심 속에 귀화 심사가 강화되고 한국어 능력 등을 더 요구 받았다. 난민법이 제정된 후 난민 신청자는 1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5백여 명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정부는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

정부는 ‘고급 인력’을 우대하고 ‘투자 이민’을 늘리기 위한 영주와 귀화 요건은 계속 완화하면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일반 귀화 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귀화 요건 중에 재산 기준을 두 배로 올렸고 고용허가제 등의 비자는 정주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숙련층이 되면서 정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부족한 노동력의 큰 부분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등 대부분 3D 산업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필요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에게 사회적·정치적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려 정주를 금지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진된 다문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부는 다문화주의 정책 대상에 한국에 정주하는 이주민만을 포함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수년 안에 귀환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배제됐다. 이주노동자가 이주민 인구의 절반을 넘는 데도 말이다. 이주노동자 가족 동반은 금지돼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인 의료 보험과 교육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 다문화 정책의 핵심 대상이었던 결혼 이주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체류 문제는 외면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배우자(남편)의 신원 보증이 있어야만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혼할 경우에도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다.

결혼 이주민 지원 사업들은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배우기 등 한국 사회와 가족제도에 동화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이 ‘가족의 재생산을 목적’에 둔 “결혼 이주

민 관리제도”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2012년 전국 다문화 프로그램을 2천 9백28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동화 프로그램 58.9퍼센트, 한국문화 체험 16.7퍼센트인데 반해 상호 문화 이해 프로그램은 7.4퍼센트에 불과했다.

셋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이주민 운동과 그들의 세력화는 홀독하게 탄압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주노조였다. 이주노조의 역대 간부들은 표적 탄압으로 추방되거나 출국을 강요받았고 노조 자체를 인정받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조차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면 언제든지 노조 인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뒤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세력화가 일절 금지돼 있다.

## 아래로부터 다문화주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라는 비판을 받았고 ‘관(정부)주도 다문화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의 논의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예컨대 김현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주민들의 “연결망이나 사회적 관계”를 “주류 문화의 한 문화로 인정하고 통합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강조한다.

반면 한양대 다문화연구소 오경석

박사는 “이주자 집단과 국내 소수자 집단 간의 연대 모색”을 통해 사회통합이 아니라 다원화를 지향하는 운동에 강조를 두는 주장을 한다.

이런 차이에도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특히 이주민 스스로의 활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주민을 정책 대상으로만 삼는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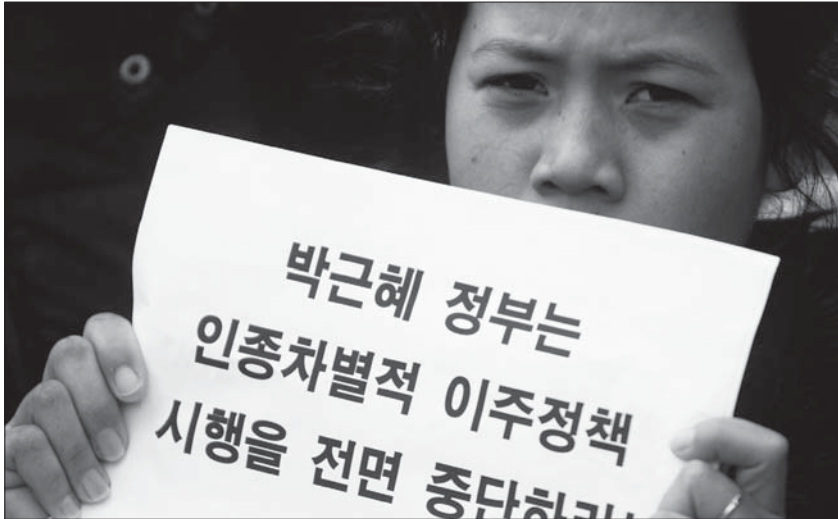
또, 문화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도 본다. 그래서 다문화주의 정책에 “일상, 노동, 정치, 교육, 문화, 미디어 등의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또는 초점을 문화보다는 ‘생존’ 문제에 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주민들이 상시적인 단속의 공포에 시달리거나 취약한 체류 자격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권리가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이런 문제의식에는 이주민 지원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기도 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상당부분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제안과 뒷받침 속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했다. 정부 정책들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다문화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수행했다. 이런 방식의 활동을 통해 이주민 지원 운동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하며 지원 단체 고유의 활동이 약화되기도 했다. 이주민 당사자들은 다문화 행사에 동원 대상이 될 뿐이었다.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는 정부의 위선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이주민 스스로의 활동과 운동을 고무하는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은 대표적인 이주민 당사자 운동인 이주노조 운동에서 두드러졌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이주노조 운동은 문화적 권리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고 이를 집단적 투쟁과 조직화를 통해 쟁취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차별적 정책과 제도에 맞선 투쟁이 불가피했고, 소수자 집단(이주노동자 공동체 등) 간의 연대뿐 아니라 노동운동

▶ 11면으로 이어짐



김종민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며 ‘다문화 없는 다문화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정선영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 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위한 공약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아직(3월 15일 현재) 이주민 관련 공약을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자스민을 비례대표로 내세우며 이주민을 위한 양 생색을 냈지만, 정작 이자스민 의원이 추진한 이주아동지원 법률은 새누리당 의원이 과반을 점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실제 현실에서 새누리당은 이주민들을 공격하는 정책을 펴 왔다.

2012년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게 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 권리를 더욱 제약했다. 또 2013년 말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퇴직금 갇탈 제도를 도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최저임금 기준을 따로 뒀 더 욱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수년간 결혼 이주민들의 권리도 더욱 후퇴해 왔다. 지난해 말 한 베트남 여성이 가정폭력 때문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해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체류하려면 결혼 생활 유지에 더욱 종속돼야 한다. 또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되던 열악한 수준의 복지마저 더욱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외국인들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주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몰아가는 정책들은 국정원이 일으킨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새터민 유우성 씨처럼 무고한 희생자들을 양산할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출산,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주민을 확대하려 한다. 이는 한국의 대다수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늘리면서도 그들이 기업주들을 위해 열악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 한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개악하고,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90일 이내로만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초단기 비정규직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돼 있음을 가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주려 한다. 새누리당이 이자스민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은 것도 그런 방편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악화된 이주민들의 처지가 보여 주듯, 새누리당의 우익 포퓰리즘 정책은 이주민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 우익 포퓰리즘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민 처지 개선을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을 공동 발의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에도 찬성 투표했다. 물론 우익들이 인종차별적으로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할 때는 방어해야 하지만 그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한계는 분명했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한 것 등에서는 새누리당보다 나은을지라도,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일부



새누리당은 이주민 의원을 내세우며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주민들을 공격해 왔다. 2015년 11월 13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행사.

독소조항만을 제외하고는 지지했다. 사실 고용허가제를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 정부였다. 또 이라크 파병 때문에 2004년 김선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때, 노무현 정부는 그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 이주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진보정당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에 정의당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주 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고,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 중심이 아닌 이주 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강화”도 포함시켰다.

노동당도 결혼 이주 여성을 가족에 종속시켜 엮매려는 체류권 제도를 개선하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나 조선족과 고려인 등의 동포들과 난민들의 권리를 위한 공약들이 추가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 이주민들은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주민들을 들여오면서도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친제국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테러 위협이 커질수록 이주민들을 속죄양 삼으며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을 이간질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이간질에 잘 대처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권리뿐 아니라 지배계급에 맞서 전체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이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위선적으로 자신들이 이주민을 위한다는 식의 이미지를 채색하지 못하게 하려면 진보진영이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총선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는 투표권도 없다.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이주민에게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줄 뿐 그 외의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들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이주민에게도 기본권의 하나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투표권을 포함해 이주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 ▶ 10면에서 이어짐

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력한 한국의 노동운동으로부터 방어 받고 함께 싸울 힘을 얻기를 기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었다.

한편, 국가 탄압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끈질긴 저항은 성소수자 운동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며 연대의 끈을 만들기도 했다.

### 계급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소수 집단의 고립과 사회 분열을 낳는다며 공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종차별을 더 강화하는 것에 맞서 다

문화주의를 옹호해야 하고, 억압받는 집단의 정체성을 비난하는 것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다.

이주민(공동체)들이 ‘우월한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옹호해야 하고 주류 문화가 좋은 문화라는 관념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체제인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여러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소수인종 집단의 차별에 맞서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또 사회를 문화들의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 계급으로 나뉜 사회로 볼 때,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의 수단으로 차이를 이용하는 자본주의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그러려면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 피착취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주의를 옹호하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전략에서도 계급이 중요하다.

계급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 기구에 의존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을 제도화하고 유지·강화하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이용해 차별을 없애기는 힘들다.

또 계급을 강조하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저항에서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단결한 노동계급 저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는 것이다.

계급 투쟁은 인종차별을 극복할 조

건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고양되면 진정한 적을 겨냥해 투쟁할 자신감이 생긴다.

물론 투쟁이 떠오른다고 인종차별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투쟁은 단결의 가능성 창출하지만, 이런 잠재력은 정치 조직과 노동조합의 구실, 그리고 더 폭넓은 이데올로기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작업장 밖의 정치적 운동과 노

동 계급 속에서 인종적 단결을 추구하는 좌파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 이주민의 압도 다수가 노동계급이고, 노동계급 내 인종적 구성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다. 그런 만큼 다른 인종적 배경이나 국적을 가진 그룹들 사이에 경쟁과 적대감을 부추기고 제도화하는 일체의 시도, 즉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제 이주·인권·노동·사회단체 국제연대 기자회견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고쳐라!

● 일시: 3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교육재정 긴축

#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산정 인원을 초과하는 교육청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설정해 놓은 정원이 매우 작기 때문에(현원이 정원의 1백20퍼센트가 넘는다), 이는 사실상 인력을 줄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기간제 규모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목표관리제도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정원을 통제하면서 기간제 규모를 줄이면 해고나 외주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스포츠 강사,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당장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원 통제로 발생하는 업무 증가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일방적 직종 통합과 강제 전보로 노동강도를 높이려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직종을 통합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다루게 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른 보상이나 교육·훈련도 뒷받침되지 않아 온전히



‘교육 개혁’을 빌미로 한 교육재정 삭감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공격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부담만 커진다. 장거리 전보로 커지는 교통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출퇴근 왕복 시간이 길어져, 기혼 여성이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만저만한 애로가 아니다.

반면, 교육부가 처우 개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은 보잘것없다. 올해 기본급 인상률(3퍼센트)은 정규직의 본봉 인상률(9급 1호봉 4.96퍼센트)에도 못미치고, 차별적인 각종 수당에 대한 개선 계획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격차를

줄여 나가려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진보 교육감들은 정부의 공격에서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제주에서 영전강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이고, 서울·경기·강원에서 일방적 전보가 시행되고, 서울·경기에서 교육청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하는 등 적잖은 진보 교육감들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무상보육 예산 떠넘기기를 비롯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으로 진보 교육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정

부, 보수 교육감과 차이가 별로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진보 교육감을 지지할 의의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진보 교육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독립적으로 싸워 진보 교육감들에 압력을 형성해 왔다. 최근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고용을 지킨 것이 그 한 사례다.

### 파업을 지지하라

지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과 교육청들의 책임 회피에 맞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학비연대회의는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쟁취,

차별 철폐, 고용 안정,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4월 1일 파업에 나선다. 총선 국면에서 학교비정규직 이슈를 제기하며 파업하는 것은 여론의 주목을 끌고 정치적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총파업·총선 승리 실천단'을 발족해 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파업을 조직하고, 총선에선 노동개약·교육개약 추진 세력 심판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 파업이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전·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 교육공무직법을 요구하고, 추경예산에 정기상여금 등 처우개선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두 계획 모두가 의미가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으로 조직된다면 노동자들의 처우를 지키고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양 노조가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11월 민중총궐기에 대규모 동원을 하고 결국 국회에서 명절상여금 대폭 인상을 쟁취했다. 올해 다시 재개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윤필언

##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중총궐기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각종 진보·좌파 단체가 많이 참가했다. 해외 언론들이 각별히 보도할 정도로 정부가 강하게 공격했지만 잘 버

티며,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모으는 구실을 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 대오가 투쟁의 주도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번 범국민대회에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올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과급제·퇴출제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 이들은 총선 이후에 정부의 성과급제 확대·강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화하려 한다.

범국민대회를 발의한 총선공투본은 이날 집회 요구로 표현된 핵심 의제들과 이를 지지하는 진보·좌파 후보들을 널리 알리고, 대중적인 총선 투쟁 돌입을 선포할 계획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모아 내 총선에서 진보·좌파진영의 공동 대응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 세월호

한편, 범국민대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 요구를 특별히 부각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4·16연대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조위 조사기한 보장을 요구하며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범국민대회 주최 측은 이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려 한다.

2주기를 앞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분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진상규명 운동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의 초점이 된다면 항의 운동의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예컨대, 2004년에 우익이 노무현을 탄핵하려다가 이에 반발해 거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시위 덕분에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가 좌선회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대패했

다.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을 열 명이나 배출하며 대약진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3월 26일 범국민대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분노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조직하고 동참하자. 그레야 총선 이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추진할 여러 개악안과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맞서 노동자들과 피억압 대중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최영준